

“올 위기·기회 공존... 中企 상생위해 10대 총수 만날 것”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간담회

중기중앙회, 성장동력 기반마련 등 9개분야 260건 정책과제 발굴
“제값 받는 경제 생태계 만들고 10대 그룹서 상생협력 정착돼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0년 신년기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모델 확산을 위해 필요할 경우 10대 그룹 총수들을 만나겠다고 밝혔다.

오는 4월15일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 차기 국회에서 입법 등을 통해 실현될 수 있도록 본인을 포함해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소속 16개 단체장들이 정치권을 직접 만나 설득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이런 가운데 중기중앙회는 이번 21대 총선을 앞두고 9대 분야에 걸쳐 총 260건에 달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과제를 발굴했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기반마련 ▲대·중소기업 상생 및 공정경제 확립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 강화 등이 9대 분야에 두루 포함돼 있다.

아울러 중기중앙회 내부적으론 정책

역량 강화, 협동조합 활성화 및 공동사업 확대, 조직문화와 체질개선 등을 위한 해 주요 정책 과제로 꼽았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신년기자간담회를 갖고 “올해는 중소기업에게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한 해”라면서 “신종코로나 발생과 내수침체 장기화, 급격한 노동환경변화 등 곳곳에서 위기상황이 예상되지만 21대 총선이 있어 중소기업 현안을 효과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기회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중소기업간 격차 해소 및 상생 ▲중소기업 관련 규제 철폐 ▲협동조합 활성화 기반 마련을 우선적

으로 언급했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이 땀 흘린 만큼 제값 받을 수 있는 건강한 경제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는 강제성 있는 법보단 민간차원의 자율적 상생협력을 통해 격차를 해소해나가야 하는데 이런 민간주도의 상생협력 모델이 10대 그룹부터 정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10대 그룹부터 관련 모델이 선례가 돼야 20대, 30대 그룹 등으로 점차 확산될 것이라 판단에서다. 김 회장은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과 혁신성장본부장을 앞세워 이들 대기업과의 협력 모델 만들기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되 필요하면 자신이 직접 그룹 총수들을 만나

겠다는 뜻도 전했다.

김 회장은 또 “중소기업을 옥죄는 규제 철폐도 꼭 해결됐으면 하는 핵심 정책 과제”라면서 “그 중 대표적인 것이 화평법인데 기업들이 1월부터 신규화확물질 0.1톤 제조하거나 수입할 때는 신고·등록해야하는데 우리도 국제기준에 맞춰 등록대상을 1톤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럽연합(EU)과 일본은 1톤 이상, 미국은 10톤 이상을 등록대상으로 하고 있다.

화평법 개정 전과 비교하면 등록물질 수는 평균 10.6개에서 31.4개로 3배 가량 늘었고, 등록비용도 4600만원에서 6억8300만원으로 15배 가량 늘어 기업들의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는 게 중소기업계의 불만이다.

중기중앙회를 구성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해 기본으로 돌아가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중기중앙회의 당초 명칭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다.

김 회장은 “지금은 협동조합의 절반 가량이 고사 직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일단 제도 개선을 통해 협동조합이 중소기업과 같은 지위를 가질 수 있게 돼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만큼 공동사업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불확실한 담합 적용 기준을 명확

히해야 할 필요가 있고, 지역협동조합 육성을 위해 14개 광역시도가 마련한 협동조합 육성 조례도 기초지자체 지방조례까지 확대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중기중앙회는 또 중소기업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내에 협동조합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기획재정부 소관인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사업자 협동조합 관련 사무도 중기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 온라인시장의 공정성 확립을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을 ‘통신판매업자’ 뿐만 아니라 ‘통신판매중개업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 내에 온라인 유통전담 부서 신설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온라인 유통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빈익빈 부익부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한때 백화점에 입점하려고 줄을 섰다면 지금은 오히려 퇴점하려고 줄을 서는 등 유통시장의 대변혁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이런 생태계 속에서 온라인에서도 중소기업이 인정받을 수 있는 시장을 확보하지는 차원에서 공정 거래 기반 조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쇼핑몰 육성 보조금 최대 1억 지원

중진공, 참여기업 55곳 선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오는 7일까지 '2020년 자사 쇼핑몰 육성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는 55곳을 선정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쇼핑몰로 집중 육성·지원할 계획이다.

분야는 ▲의류 ▲화장품 ▲생활용품 ▲농수산식품 ▲의약품 등 5대 핵심 소비재다.

신청 대상은 외국어로 구축돼 있고 결제, 배송, 교환·반품, 고객 응대 서비스까지 제공 가능한 자사 쇼핑몰을 보유한 기업이다. 올해는 해외 현지 쇼핑몰 개설 및 운영 비용을 지원하는 '온라인지사화' 분야도 새로 모집한다.

참여 기업에게는 자사 쇼핑몰 홍보·마케팅 비용과 쇼핑몰 리뉴얼 비용을 온라인수출 성장 단계별로 차등해

총 사업비의 70% 이내 최대 1억원까지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하반기 평가를 통해 수출 성과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지원금의 10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추가 프로모션 기회도 함께 제공한다.

한편, 중진공은 지난해 70개의 자사 쇼핑몰을 육성해 311억원의 온라인수출 성과를 달성했다.

아이돌 굿즈와 한류 음반 등을 수출하는 에이치엠인터내셔널의 경우 관련 사업을 통해 K-pop 온라인물 리뉴얼, 페이스북, 유튜브 등 SNS를 활용한 한류 마케팅 지원을 받았다. 사업 참여 이후 세계 240여개 국가로 수출을 확대하는 등 수출 실적이 2017년 당시 320만 달러에서 지난해엔 1580만 달러까지 늘어났다.

사업 참여신청은 고비즈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中企, 7일내 中 원자재 미확보땀 직격탄”

신종코로나에 中 수출 위태

박영선 중기부 장관, 현장 방문 “매출감소 등 차질땀 긴급자금”



3일 오후 경남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태림산업 회의실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기업 현장간담회에 참석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오른쪽)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뉴시스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는 아무것도 아니다. (신종코로나)로 2차 피해, 3차 피해가 (기업들에게) 발생할 수 있다. 우리 중국에서 원자재 가져와 부품 만들어 중국을 포함해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데 이미 중국 수출 부문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면 협력업체들도 같이 조업을 중단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 다른 회사들도 부품 수급 안돼 공장 가동이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경남에 있는 A 중소기업 대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확산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3일 경남 지역을 찾았다.

박 장관의 이날 현장 방문엔 김경수 경남도지사, 여영국 정의당 의원 등도 함께 했다.

창원국가산업단지내에 있는 태림산업에서 열린 박 장관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경남지역 중소기업들을 신종코로나 여파가 언제까지 이어질 지 예단할 수 없는 가운데 중국으로부터의 원자재 수급 불안, 제품 생산 차질, 자금 부족 문제 등에 대한 다양한 애로를 쏟아냈다.

특히 우리 기업들은 중국 정부가 현지 기업들에게 정상 근무를 권고한 오

는 10일을 분기점으로 보고 있는 분위기다. 중국의 춘절 영향으로 지금까지는 공장 가동에 필요한 원자재를 확보해 놓아 버릴 수 있지만 10일 이후에도 신종코로나 확산이 계속되고, 이때문에 중국 기업들의 공장 가동이 여의치 않을 경우 직격탄을 한국 기업들이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상하이, 동관 등에 있는 현지 기업과 거래하는 B중소기업 관계자는 “보통 (춘절이 끝나는) 2월5일 정도 되면 중국 업체가 다시 재료를 준비해 우리에게 보내야 하지만 중국 정부가 인력 이동을 막고 있어 자칫 이달 말까지 원재료 준비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면서 “2월10일에 맞춰 짜야 할 계획을 장기 계획으로 돌려야 하는 상태이고, 당초 중국에 수출하려던 계획도 문제가 생겨 회사 매출에 악영향이 있을 것 같다”며 걱정했다.

박 장관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매출

감소, 부품조달 지연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긴급자금 융자 및 특례보증 등을 약속했다.

박 장관은 “지난 주말 중국쪽(기관·기업등)과 직접 통화를 해 본 결과 10일 조업재개가 관건이었는데 막상 현장에 와 보니 기업들도 10일에 중국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조업을 시작할지를 가장 우려하고 있는 모습이었다”면서 “지금까지도 굉장히 힘든 시기였지만 10일 이후의 시나리오를 대비해 정부가 더 착실하게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 장관은 간담회 후 진주 중앙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신종 코로나 확산에 따른 불안 심리로 관광객 감소, 외부활동 자제 등 소비위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전통시장, 관광지 등에서 소상공인들의 영업활동에 어려움이 예상돼 위기극복을 위해 다양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방통위, 신규사업에 국민 아이디어 반영

‘방통위 예산 공모제’ 실시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방통위 업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예산사업 추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방통위 예산 공모제’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3일부터 28일까지 4주간 진행되며, 방통위가 예산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송·통신 분야 신규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소

정의 양식에 맞춰 제안하면 된다.

방통위는 내·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하고, 최우수상 1건에 대해 30만원 상당의 상품권, 우수상 4건에 대해 각 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다. 또 국민들의 많은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추첨을 통해 1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번 공모제를 통해 발굴된 아이디어를 육성·보완해 내년 신규 예산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채윤정 시전문기자 echo@